

KERI Brief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ks@keri.org)

금 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중국 등 해외 현지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해외생산의 이점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U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의 슬로건으로 법인세 인하, 국내 복귀기업의 공장이전비 보조, 설비투자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여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기업이 증가되는 성과를 냈다. 일본은 2011년 3.11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일본지역의 '부흥특구' 지정,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국가전략특구에 규제특례, 세제·금융지원 등 아베내각의 U턴 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되었다. 한국도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입자·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지자체와 MOU 기준으로는 총 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실제 투자가 진행중인 기업은 36개(산업통상자원부)로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U턴 사례는 쏠쏠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2월, 2013년 이후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가동예정인 30개 U턴기업의 투자·고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투자금액 1,597억 3,980만 원, 고용창출 1,78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여력 감소로 인한 국내 설비투자 증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 하락하는 등 국내투자의 부진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5~201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6.6%)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3.3%) 보다 2배 가량 높으며,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보호무역주의 타개)가 급증(39.8%(2001/2005)→74.7%(2011/2016))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의존도는 2000년 12.8%에서 2015년 19.2%로 상승추세로 주력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수출둔화, 국내 제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감소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KOTRA의 해외진출기업 통계(2016.6, 기준) 분석결과, 한국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총 1만 1,953개 법인의 채용인력은 301만 6,263명(본사파견 4만 9,149명, 현지채용 296만 7,114명)이다.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수(46만 7천 명)의 6.5배 가량이다.

다만, 최근 국내 산업공동화를 유발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현지시장진출형 제조업 해외투자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국 U턴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 또는 국내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임금 수준 완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많다. 단기적으로는 기업U턴 촉진을 저해하는 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생산거점의 역할을 해온 중국 등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생산의 이점이 약화되자,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켜 양질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리쇼어링, U턴)를 적극 추진

- 오바마 정부는 20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의 슬로건으로 법인세 인하(38%→28%, 제조업 25%)와 함께, 국내 복귀기업의 공장이전비용 20% 보조, 설비투자 조세감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감면(35%→15%, 최저한세 폐지),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미국 역수출에 35% 관세 부과 등 미국내 기업투자 및 리쇼어링(Reshoring)¹⁾을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멕시코산에 최고 35%의 국경세 부과를 공언하여 글로벌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GM, 포드 등 미국계 자동차 업체들의 멕시코 공장 신·증설 계획 포기, 도요타, 삼성전자, LG전자 등 외국계 기업의 미국내 투자 유도)

- 일본은 아베 내각에서 도쿄와 오사카 등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R&D) 투자지원 등 적극적인 U턴기업 지원정책을 추진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소위 U턴기업지원법)」을 제정(2013.12)하여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로의 U턴기업 실적은 미미

* 국내로의 U턴기업 추이(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와 MOU 체결 기준) : 14개(2012)→37개(2013)→16개(2014)→9개(2015)→9개(2016.10)

□특히, 중국 등 개도국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이들 국가의 한국기업 U턴수요를 적극 수용해야 하나, 오히려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한국 제조업체의 총 부가가치 중 해외생산비중은 지난 10년간(2003~2013) 4배 증가 : 4.6%(2003)→7.9%(2006)→13.5%(2009)→17.2%(2012)→18.4%(2013년)<한국은행>

-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IFDI) 보다 해외직접투자(OFDI)가 2배 가량(2015년 해외투자금액 402억 달러,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209억 달러) 많아 국내자본의 순수출증가로 제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6년간(2001~2016년)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분석을 통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U턴 가능성과 고용창출효과를 검토하고, 국내로 이미 복귀한 U턴기업(30개사)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미국·일본의 U턴기업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U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고용과 성장이 정체된 국가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 생산거점의 국내복귀(U턴)를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해외에서는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기업의 U턴이라 표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U턴'으로 통용하고자 하며, U턴의 개념에 대해 학계에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U턴기업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기업이 영업장소 혹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생산시설 및 영업장소를 옮긴 기업'(문종철 외, 2014)으로 정의하고자 함

II.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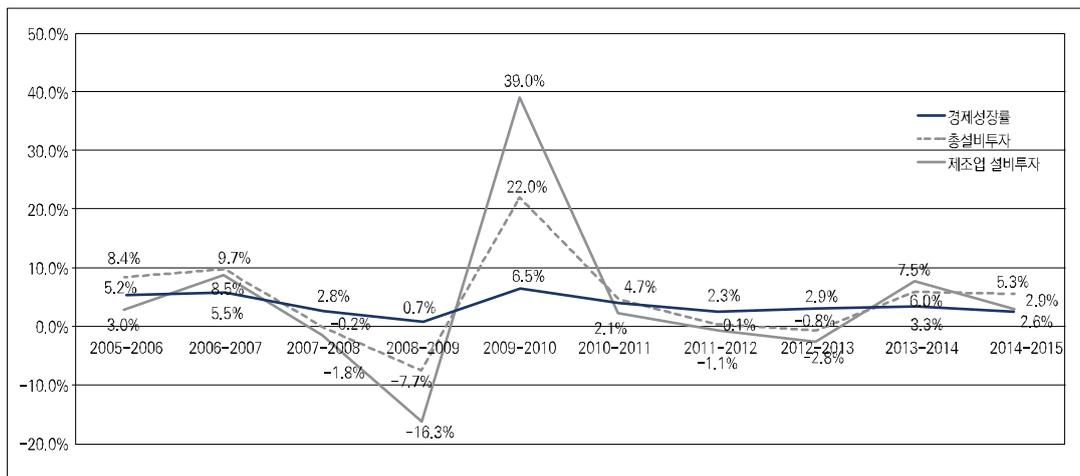
1. 국내 설비투자 감소, 해외직접투자 증가 지속

□ 지난 10년간(2005~2015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분석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연관성이 크며, 제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경제성장률 정체와 성장잠재력의 악화로 연결

- 동기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연평균 3.3% 증가)이 저성장 기조에 영향을 미침

〈그림 1〉 최근 10년간(2005~2015년) 국민계정의 설비투자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2010년 불변가격, 10억 원, %)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
국민소득	1,034,337.5	1,087,876.4	1,147,311.4	1,179,771.4	1,188,118.4	1,265,308	1,311,892.7	1,341,966.5	1,380,832.6	1,426,972.4	1,464,244.0	
경제성장률 (%)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3.3
총설비투자	91,014.7	98,649.5	108,195.7	108,014.3	99,711.8	121,621.4	127,284.8	127,444.2	126,441.4	133,993.1	141,114.4	
증감률 (%)	-	8.39	9.68	-0.17	-7.69	21.97	4.66	0.13	-0.79	5.97	5.31	4.5
제조업 설비투자	47,712.1	49,155.0	53,338.3	52,382.6	43,830.0	60,920.9	62,196.2	61,522.3	59,820.1	64,322.5	66,178.4	
증감률 (%)	-	3.02	8.51	-1.79	-16.33	38.99	2.09	-1.08	-2.77	7.53	2.89	3.3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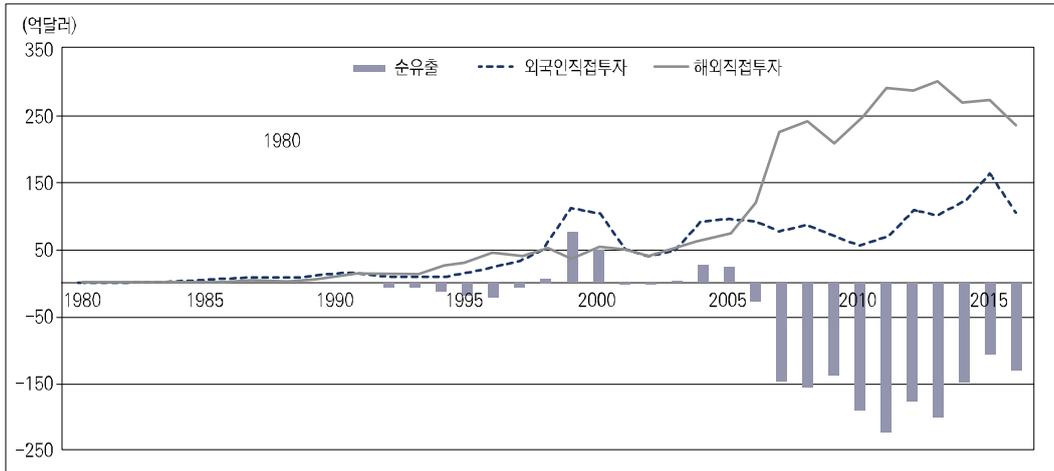
□ 최근 10년간(2005~2015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6.6%)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3.3%) 보다 2배 가량 높음

-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 (2005) 4조 7,712.1억 원→(2010) 6조 920.9억 원→(2015) 6조 6,178.4억 원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 (2005) 38억 8,774만 불→(2010) 74억 4,623만 불→(2015) 73억 3,498.7만 불
 - 2006~2016년간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2%이나,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7.0%
- 2005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여력 감소로 인한 국내 설비투자 증 제조

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투자의 부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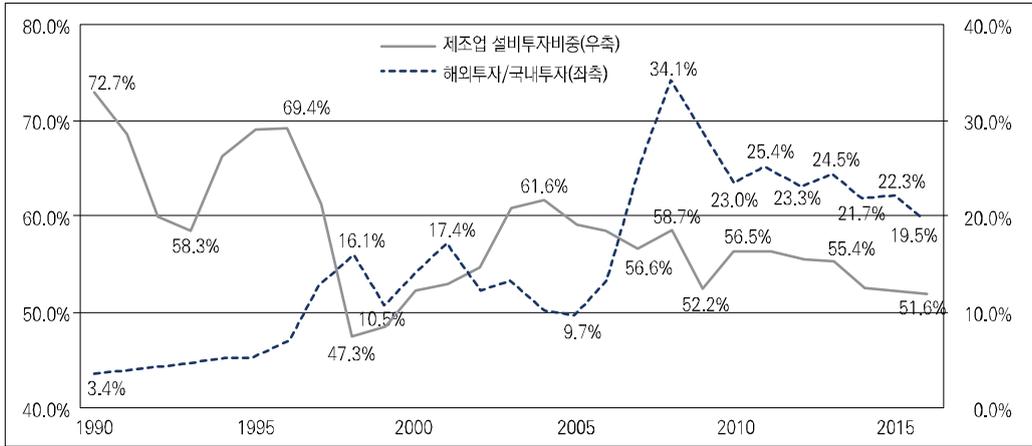
-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의 비중은 1996년 이전에 3~7%, 1997~2006년에는 10~17%, 2007년 이후에는 20%를 상회. 2008년 34.1%의 정점에서 다시 20% 수준을 유지(2016년 19.5%)
- 제조업의 국내 설비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산업은행) : 9.7%(2005) → 19.5%(2016) ∴ 2배 증가 (한국은행) : 8.1%(2005) → 22.6%(2016) ∴ 2.8 배 증가
- 총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 72.7%(1990)→69.3%(1995)→52.3%(2000)→59.2%(2010)→51.6%(2016) 하락추세

〈그림 2〉 한국 FDI 순유출액 추이(도착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그림3〉 제조업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중



자료 : KDB산업은행 업종별 설비투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 2001~2016년 한국 제조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현지시장 진출,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보호무역주의 타개)의 급증이 국내 설비투자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나, 2000년대 중반까지 수출촉진형에서 중반이후 현지시장 진출형이 절반이상으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심화

* 산업공동화 유발형 해외직접투자 비중: 39.8% (2001/2005)→68.5%(2006/2010)→74.7% (2011/2016)

□ 다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 모두 각각 2006년, 2007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며,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35%, 25%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는 2001년 1,266개에서 2016년 815개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고, 투자금액은 2011년 96억 1,714만 달러로 정점을 보인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6년도에도 58억 1,398만 달러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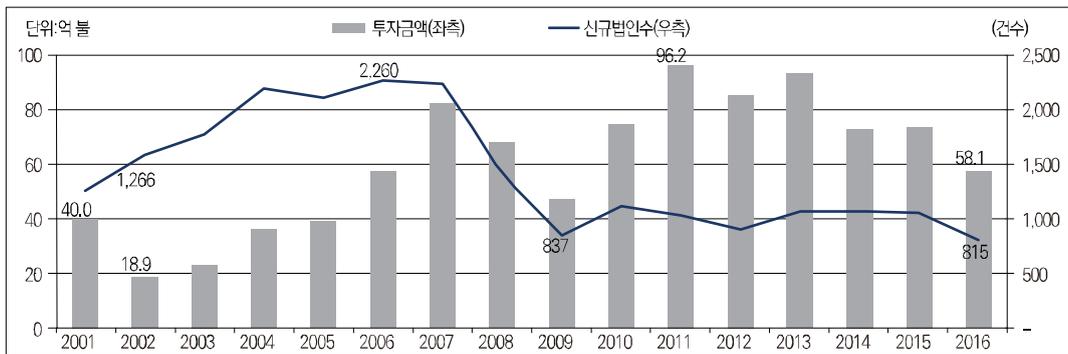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전산업 해외투자 신규법인 수의 제조업 비중은 2001년 58.1%에서 2016년 35.1%로, 투자금액의 경우도 동기간 74.5%에서 24.9%로 대폭 감소

〈표 1〉 목적별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금액의 연도구간별 추이(2001~2016년)

구분		2001-2005		2006-2010		2011-2016	
		투자금액	%	투자금액	%	투자금액	%
국내 산업 공동화	현지시장진출	3,252,839	20.7	16,213,618	49.4	29,617,955	61.9
	제3국진출	17,340	0.1	614,165	1.9	712,438	1.5
	저임활용	2,502,236	15.9	5,211,998	15.9	5,131,984	10.7
	보호무역타개	480,798	3.1	453,818	1.4	280,937	0.6
	소계	6,253,213	39.8	22,493,599	68.5	35,743,314	74.7
국내 산업 활성화	자원개발	242,827	1.5	501,234	1.5	809,965	1.7
	원자재확보	103,137	0.7	80,128	0.2	11,932	0.0
	수출촉진	7,182,955	45.7	7,829,109	23.8	8,943,579	18.7
	선진기술도입	365,372	2.3	787,102	2.4	2,214,077	4.6
	소계	7,894,291	50.2	9,197,573	28.0	11,979,553	25.0
기타	1,564,449	10.0	1,161,180	3.5	142,680	0.3	
합계	15,711,953	100.0	32,852,352	100.0	47,865,5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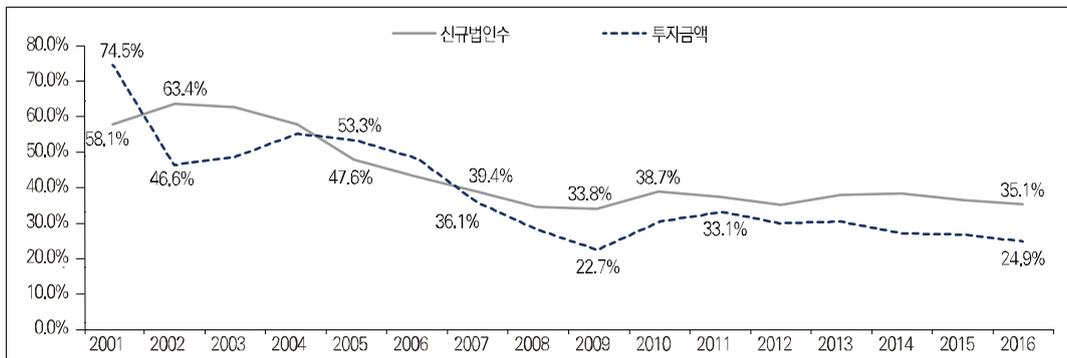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하고, 임희정(2015) 해외직접투자 목적별 분류를 참조하여 분석

〈그림 4〉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5〉 전산업 해외직접투자 대비 제조업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현지시장진출형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은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투자부진은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감소시키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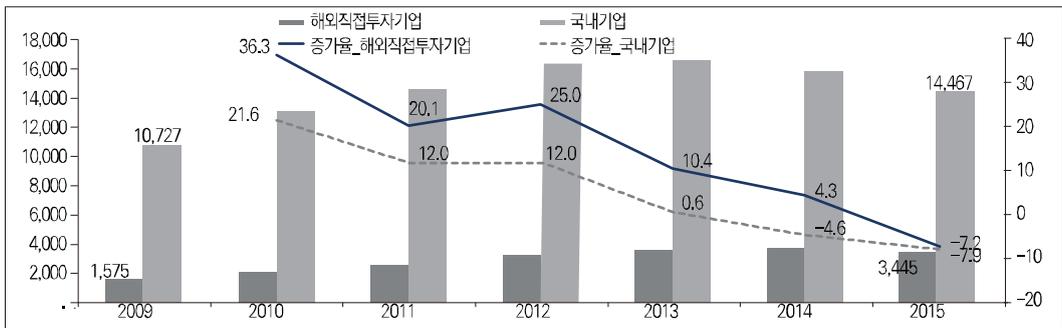
-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은 2009년 대비 2015년이 1.4배 증가한 반면,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은 동기간 2.2배 증가(2009년 1,574.9억 달러 → 2015년 3,445.3억 달러)
-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 의존도는 2000년 12.8%에

서 2015년 19.2%로 상승 기조. 특히,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수출둔화 및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주요 12대 업종의 해외생산비중은 26.6%(총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액 비중, 2015년 5월 업종별 협단체 설문조사 결과)이며, 가전(77.6%, 휴대폰·정보기기 포함), 디스플레이(57.3%), 자동차(40.2%)의 해외생산비중이 높음(문병기·김건우, 2016)

〈그림 6〉 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제조업 매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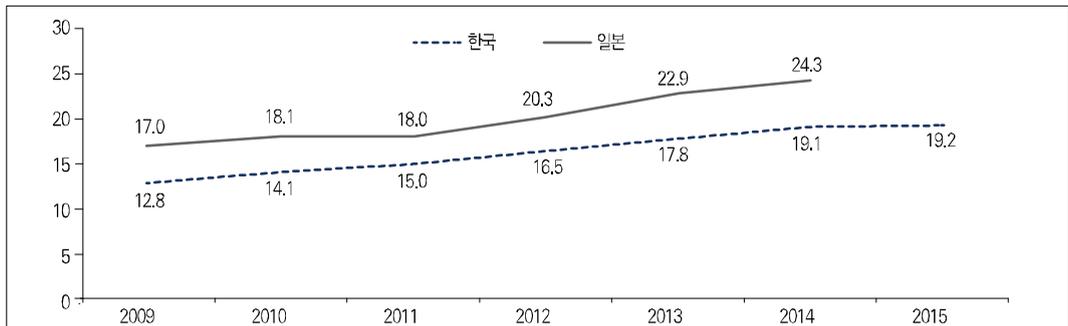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주: 국내기업의 매출액은 각년도말 증가기준 원달러 환율 적용

〈그림 7〉 한일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비교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일본 경제산업성

주: 제조업 해외생산비중=(제조업 해외직접투자기업 매출액/제조업 해외직접투자기업 매출액+국내 제조업 매출액)×100

3.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법인의 고용현황(추정)

□ 2016년 6월 기준, KOTRA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분석결과,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한 총 1만 1,953개사²⁾에 채용된 총 인력 수는 301만 6,263명(본사파견 4만 9,149, 현지채용 296만 7,114명).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수(46만 7천명³⁾의 6.5배 가량에 해당

- 한국 제조업체 해외진출기업(5,781社)은 전산업의 절반 가량(48.4%)이나, 채용된 인력 수는 259만 1,935명(본사파견 29,735명, 현지채용 256만 2,200명)으로 전산업의 85.9%에 해당
- 응답업체수 1개사 당 평균고용인원을 전산업 진출 기업으로 단순 환산하면, 345만 447명(본사파견

66,166명, 현지채용 338만 4,281명)으로 추정⁴⁾되며 제조업체의 경우, 289만 9,027명(본사파견 39,292명, 현지채용 285만 9,735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아시아(84.2%), 유럽(8.1%), 중남미(2.9%) 順으로 현지 채용인력의 비중이 높음

- 2) 한국수출입은행의 「2015년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해외현지법인수는 49,212개사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은 22,813개사로 전체의 46.4%(2014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수(397,171개사)의 5.74%에 해당(통계청))
- 3) 통계청 청년실업자수(15~29세)는 46만 7천 명(2016년 6월 기준)
- 4) 업종별, 진출국가별 응답업체의 평균 채용인력을 산출하여 미응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표2〉 한국 해외직접투자법인(전업종, 제조업)의 고용현황(2016년 6월말 기준)

(단위: 개사, 명)

지역	전산업								
	진출기업(A)	본사파견				현지채용			
		응답기업	고용인원	1사 당 평균(B)	추정(A*B)	응답기업	고용인원	1사 당 평균(C)	추정(A*C)
CIS	333	304	934	3.03	1,008	320	40,045	127.28	42,385
북미	828	476	2,291	4.89	4,047	497	44,340	84.66	70,100
아시아	9,154	6,685	34,863	5.10	46,716	8,007	2,497,008	304.77	2,789,859
아프리카	104	97	413	4.24	441	90	19,443	208.78	21,714
유럽	716	473	1,904	3.89	2,788	501	240,627	452.81	324,212
중남미	444	269	3,456	12.52	5,560	388	85,370	210.73	93,566
중동	374	358	5,288	14.99	5,606	356	40,281	113.49	42,446
합계	11,953	8,662	49,149	5.54	66,166	10,159	2,967,114	283.13	3,384,281

지역	제조업								
	진출기업(A)	본사파견				현지채용			
		응답기업	고용인원	1사 당 평균(B)	추정(A*B)	응답기업	고용인원	1사 당 평균(C)	추정(A*C)
CIS	81	75	271	3.61	293	75	25,428	339.04	27,462
북미	170	108	655	6.06	1,031	123	23,194	188.57	32,057
아시아	4,950	3,813	24,045	6.31	31,215	4,464	2,229,744	499.49	2,472,498
아프리카	25	24	85	3.54	89	25	7,082	283.28	7,082
유럽	253	203	1,054	5.19	1,314	211	185,658	879.90	222,614
중남미	204	124	2,660	21.45	4,376	188	78,266	416.31	84,927
중동	98	97	965	9.95	975	96	12,828	133.63	13,095
합계	5,781	4,444	29,735	6.80	39,292	5,182	2,562,200	494.68	2,859,735

자료: KOTRA, 해외진출기업 검색(www.ois.go.kr)

4. 소결 ; 2001~2016년 한국 제조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턴전환 가능성 검토

□ 2013년 이후, 해외시장진출, 제3국 진출, 저임활용, 보호무역주의 타개 등 국내 산업공동화를 유발하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우리나라 U턴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시점에 와 있음

- 현지시장 진출, 보호무역 타개는 진출국가의 무역장벽 및 현지화의 필요성이 해외진출의 주된 이유로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U턴) 유인이 미흡하나, 저임활용 목적의 해외투자는 국내 U턴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 존재(문종철외, 2014)

* 산업공동화 유발형 해외직접투자 추이(백만불):
6,557('12)→6,971('13)→5,431('14)→5,464('15)→4,804('16)

□ 특히, 전산업 대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L”자형(감소·보합 추세)으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현지시장진출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향후 한국 임금수준의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으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U턴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대기업은 유럽지역에서 신흥시장 공략차원에서 중남미지역 등으로 중소기업은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지역으로 해외투자비중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 생산코스트 경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회복이 해외진출기업 국내U턴 촉진의 관건

□ 따라서 한국 제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생산코스트 경감, 규제개혁 등 전반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U턴을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하여 국회, 정부(중앙, 지방), 국민 모두의 범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 KOTRA에서 파악한 해외현지법인증 제조업체의 10%(578개사, 28만 6천 명 고용창출)만 국내로 회귀한다면, 국내 청년실업자의 61%가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한국 U턴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활성화 저해요인

1. 한국 U턴정책 주요 내용

□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행지침」 및 「외국인력 도입 계획공고」 등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 세제, 입지, 인력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⁵⁾

- 2012년 4월 26일, 지식경제부는 제119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U턴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7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U턴기업 지원 보조금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U턴기업 지원대상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해외 및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30% 이상 지분보유 등)하며,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해야 하며, 국내 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조건(U턴기업지원법 제2조)

- U턴기업 지원제도 : 법인·소득세는 최장 7년간 최대 50~100%(5년간 100%, 2년간 50% 감면)까지 감면하고, 관세(자본재 해외도입관세)는 5년간 최대 50~100% 감면(한도 2억 원)하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 당 고용보조금도 기존 78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 한국 입지 투자액의 9~40%, 설비 투자액의 8~24% 보조금(기업 당 최대 70억 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때 보증료는 0.2%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중소기업청에 전용 R&D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

5)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소관, U턴기업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행지침(2008년 9월 시행, 국토해양부 소관, U턴기업 입지 지원의 법적 근거), 외국인력 도입 계획공고(2007년 3월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U턴기업의 인력지원 법적 근거)

〈표 3〉 한국 U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현황(요약)

구분	지원내용 요약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U턴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감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후 국내 이전(국내사업장 보유 무관) - 5년간 100%, 2년간 50% •해외사업장 유지 또는 축소후 국내사업장 신설 -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사업장 이전을 위한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후 국내 이전(국내사업장 보유 무관) - 관세 100% 감면 •해외사업장 유지 또는 축소후 국내사업장 신설 - 관세 50% 감면
투자보조금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기업 당 최대 60억 원 한도)	
	입지	분양가·지가·임대료의 9~40% 보조 → 한도 5억 원
	설비	투자금액의 8~24% 지원 → 입지, 설비 보조금 합산 최대 60억 원
고용보조금	국내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해 1년의 기간내에 1인 당 1,080만 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당 최대 100명 한도)	
인력지원	현지인력 채용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 희망시 "특정활동사증(E-7)" 허용(내국인 고용인원의 10%이내, 최대 30인 한도)
	외국인력	5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제조기업에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E-9) 추가 고용(40인 한도) 허용
입지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구조조정·컨설팅 지원	청산절차 자문비용의 50~70% 지원(5만 위안 한도)	

자료: KOTRA, 국내복귀 기업 지원 가이드(2016)에서 발췌 정리

<p>2. 한국기업의 U턴 현황 및 경제적 효과</p> <p>가. 2012년 이후 U턴기업 현황</p> <p>▣ 2012년 이후 국내 복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MOU)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85개사이나, 실제 U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43개사이며,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 위주</p> <p>- 201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기준으로는 총 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말 현재 법률상 U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3개사이며,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은 36개사, 공장건설·부지물색 등 준비 중인 기업은 24개사(산업통상자원부)</p>	<p>-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U턴사례는 全無</p> <p>▣ 2017년 2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각 시·도의 협조를 통해 파악한 U턴기업은 총 30개사이며, 이 중 2013년 U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에 실제 U턴하여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한 당초 MOU 체결에 비해 U턴실적이 매우 저조</p> <p>- 총 30개사 가운데, 27개사(87.1%)가 중국에서 U턴했으며, U턴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주력제품의 유형이 일반범용제품 및 사양업종(21社)이며, 고부가가치업종은 9개사(30%)</p>
---------------------------------------------------------------------------------------------------------------------------------------------------------------------------------------------------------------------------------------------------------------------------------------------------------------------------------------------------	----------------------------------------------------------------------------------------------------------------------------------------------------------------------------------------------------------------------------------------------------------------------------------------------------------------------------------

〈표 4〉 U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현황

구분		세부 내용
연도별	MOU	14('12) → 37('13) → 16('14) → 9('15) → 9('16)
	선정	27('14) → 4('15) → 12('16)
진출 국가	MOU	중국(78), 베트남(4), 캄보디아(2), 방글라데시(1)
	선정	중국(39), 베트남(2), 캄보디아(1), 방글라데시(1)
업종별	MOU	주얼리(26), 신발(12), 섬유(11), 전자(12), 자동차(3), 기타(3)
	실제	기계(13), 주얼리(9), 신발(5), 전자부품(8), 섬유(4), 기타(4)
복귀 지역	MOU	전북(32), 부산(17) 경기(10), 충남(6), 세종(3), 광주(3), 경북(5), 전남(2), 대구(1), 강원(2), 인천(1)
	실제	전북(14), 부산(8), 경기(7), 세종(5), 경북(4), 충남(3), 전남(1), 광주(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7.1, 2016년말 현재), 가동 또는 U턴예정기업은 한경연 U턴기업 실태조사(2017.2)¹⁾

주: 1) ▲조사목적 :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현행 한국 U턴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U턴 활성화 방안 모색

▲조사표본 : U턴기업지원법 제정 이후(2013년 8월), U턴기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각 시도에서 관리 또는 지원하고 있는 국내복귀 또는 복귀예정기업 가운데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가동예정인 30개 기업

▲응답현황 : 조사대상 30개 기업 중 30개사 응답(응답률 100%)

▲조사기간·조사방법: 조사기간 : 2017.2.1~2017.2.9(9일) - 조사방법 : 전화·E-Mail·fax 조사

▲조사내용 : ① 국내복귀(U턴) 당시, 관련사항(해외진출국가, 국내복귀년도/복귀지역, 국내 복귀동기, 국내동기형태, 경제적 효과(국내투자/고용)), ② 한국의 U턴기업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만족도, ③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복귀(U턴) 당시 또는 복귀이후 가장 큰 애로, ④ U턴 촉진 위한 현행 U턴기업지원법 상 개선사항, ⑤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복귀(U턴)가 활성화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 등록된 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이며,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한국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높은 고성장 기업

□ U턴기업의 국내복귀동기는 '해외 Push요인'(62.0%) 이 '국내의 Pull요인'(30.4%) 보다 2배 가량 많으나, 고부가가치제품(총평균 보다 높은 항목)은 "국내요인"(37.9%)이 해외요인(20.6%) 보다 높음

- '현지 노동정책 또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로 인건비 상승'(22.8%)과 '낮은 노동생산성'(5.4%) 등 인력 문제가 28.2%로 가장 많았고, '외자기업 특혜 축소'(12.0%)와 '환경 등 각종규제 강화'(4.3%)가 16.3%, 'Made In Korea 브랜드 활용'(12.0%) 順

- 주력제품 유형별(고부가가치 vs 일반범용+사양업종)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설문항목을 구분할 경우, 고부가가치(9개사) 기업은 'Made In Korea 브랜드 활용'(13.8%),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구(10.3%)', '우수한 노동력 확보'(6.9%) 등으로 국내로의 복귀를 선택

〈표 5〉 U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실제 공장 가동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인 기업

구분	세부 내용
연도별	4+α('12) → 4('13) → 8('14) → 3('15) → 6('16)→ 4('17) → 1('18)
진출국가	중국(27), 베트남(2), 방글라데시(1), 일본(1)
업종별	기계(4), 주얼리(6), 신발(5), 전자부품(7), 섬유(2), 금속(1), 자동차(1), 기타(4)
주력제품 유형 ¹⁾	고부가가치제품(9사, 30.0%), 일반범용제품(19사, 63.3%), 사양업종제품(2사, 6.7%)
복귀지역	전북(9), 부산(8), 경기(6), 세종(3), 경북(2), 충남(1), 광주(1)

주: 1) 주력제품의 유형은 전인우(2009), 해외로부터의 국내 U턴기업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방향(지식경제부, 중소기업연구원)의 분류방식을 인용했으며, 설문지에 해당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

〈표 6〉 한국 U턴기업의 국내 복귀 동기(*우선순위로 3개 복수응답)

해외진출국 Push요인(57건, 62%)								
인건비 상승	낮은 노동생산성	외자기업 특혜 축소	환경등 각종 규제 강화	기술보호 및 유출 방지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유통망 확보 곤란	비효율적 자원활용 재무애로	가격경쟁 심화
21 (22.8%)	5 (5.4%)	11 (12.0%)	4 (4.3%)	3 (3.3%)	3 (3.3%)	1 (1.1%)	5 (5.4%)	4 (4.3%)
국내 Pull요인(28건, 30.4%)					기타(7건, 7.6%)			합계
내수시장 신속대응	고부가가치 제품 추구	Made In Korea 활용	국산부품·소재조달, 제휴 강화	운송비·내수시장 공략	우수 노동력 확보	환율 변동	기타	
6 (6.5%)	4 (4.3%)	11 (12.0%)	2 (2.2%)	1 (1.1%)	4 (4.3%)	1 (1.1%)	6 (6.5%)	92 (100.0%)

〈표 7〉 한국 U턴기업의 주력제품 유형별 국내 복귀 동기

구분	해외진출국 Push요인(20.6%)	국내 Pull요인(37.9%)
고부가치제품 (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의 낮은 노동생산성(10.3%) •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에 따른 재무적 곤란(6.9%) • 해외 진출국의 기술보호·유출 방지(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In Korea 브랜드 활용(13.8%)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구(10.3%) • 우수한 노동력 확보(6.9%) • 내수시장에의 신속한 대응(6.9%)
일반범용제품+ 사양업종(21개사)	해외진출국 Push요인(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인건비 상승(25.4%) • 외자기업 특혜 축소(14.3%) • 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4.8%) • 가격경쟁 심화(4.8%) 	국내 Pull요인(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부품·소재 조달/제휴 강화 (3.2%) • 운송비 및 내수시장 공략(1.6%)

*전체 평균보다 높은 설문항목

〈표 8〉 한국 U턴기업의 국내 복귀 유형

현지 사업장 완전청산·양도, 국내 복귀	현지 사업장 부분축소, 생산시설 부분이전	현지사업장 유지	시설 신·증설 없이 현지생산 감소, 한국생산 증가	합계
21社 (70.0%)	4社 (13.3%)	3社 (10.0%)	2社 (6.7%)	30社 (100.0%)

〈표 9〉 한국 U턴기업의 국내 투자금액 및 고용효과(2017.2.10,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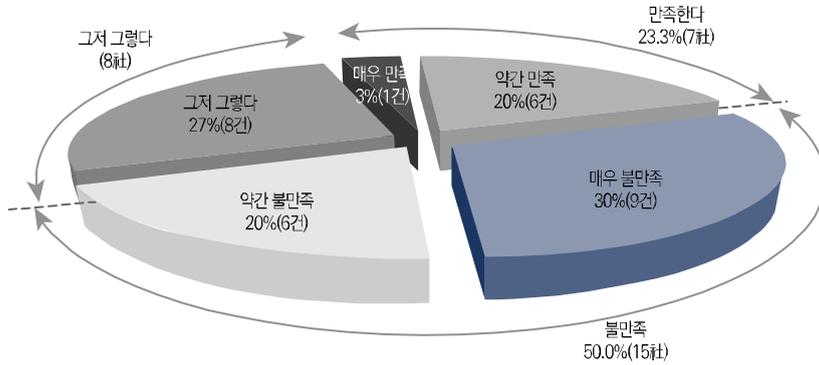
시·도	U턴기업수 (社)	국내투자/고용효과			
		투자금액(백만원)		고용인원(명)	
		합계	1사 당 평균	합계	1사 당 평균
전북	9	24,613	2,734.8	490	54.4
부산	8	39,842	4,980.3	770	96.3
경기	6	16,600	2,766.7	155	25.8
세종	3	25,800	8,600.0	145	48.3
충남	1	7,984.8	7,984.8	43	43.0
광주	1	23,000	23,000.0	50	50.0
경북	2	21,900	10,950.0	130	65.0
합계	30	159,739.8	5,324.7	1,783	59.4

- 다만, 조사내용에 포함 안되었지만, U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자금조달 애로'(16.5%), '조세지원 미흡'(12.1%)이 응답(14p 참조)하여 U턴기업에 제공하는 조세감면, 투자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고 국내에 복귀한 기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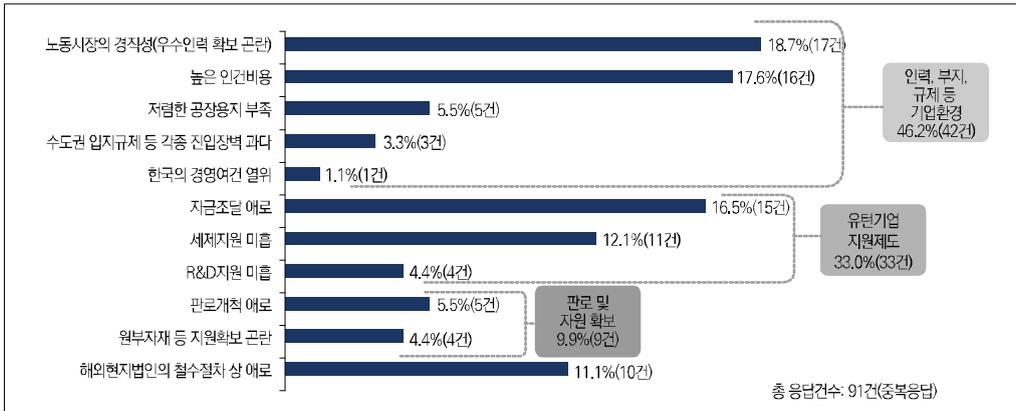
□ 국내 복귀 유형으로는 '현지 사업장 완전청산·양도 후, 국내 복귀'(70%)가 가장 많음

- 그 밖에 '현지 사업장 부분축소, 생산시설 부분이전'(13.3%), '현지 사업장 유지'(10.0%), '시설 신·증설 없이 현지생산 감소, 한국생산 증가'(6.7%) 순

〈그림 8〉 한국의 U턴기업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만족도



〈그림 9〉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 당시 또는 복귀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



나. U턴기업의 경제적 효과

□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가동예정인 30개 U턴기업은 총 1,597억 3,980만 원을 투자(1사 당 53억 2,470만 원)하였고, 이로 인한 총 고용창출인원은 1,783명(1사 당 59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 총 투자금액은 부산시(398억 원), 세종시(258억 원), 전북도(246억 원) 順으로 많았고, 1사 당 투자금액

은 광주시가 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전북도 順으로 낮음

- U턴기업의 채용인원규모는 50인 미만(16사, 53.3%), 50~100인 미만(12사, 40%) 등 93.3%가 영세한 규모이며, 100~300인 이상 1개사, 300인 이상 1개사 등

3. 한국기업의 U턴 활성화 저해요인

가. U턴기업의 인식 : U턴기업 지원정책의 평가 및 애로요인

□ **현행 한국의 U턴지원제도 및 인센티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50.0%). 긍정적인 평가(23.3%) 보다 2배 이상 많았음**

- '매우 불만족'(30.0%)이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26.7%), '약간 만족(20%) 順

□ **국내 U턴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당시, 또는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임금과 인력 확보 곤란'(36.3%), '자금조달 애로'(16.5%), '세제 지원 미흡'(12.1%) 順으로 응답**

- 그 밖에 '해외현지법인 철수절차 상 애로'(11.0%), '저렴한 공장용지 부족'(5.5%), '판로개척 애로'(5.5%), '원부자재 등 자원확보 곤란'(4.4%), 'R&D지원 미흡'(4.4%) 順

나.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리스크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주저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국내복귀 후 현지국가에서 받게될 불이익이나 현지와의 거래관계 단절 우려 등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절차상 애로**

- 중국 내 사업장을 완전 청산할 경우, 4년 이상 걸리고 업력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최소 300억 원, 최대 1천억 원까지 중국 당국에 세금을 배상해야 하는 등 해외 현지 국가의 여러 관련법령과 제약 등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음

-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KOTRA에 설치한 현지청산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

지 청산과 국내복귀 후에 기업들이 겪게 될 애로 해결은 각 기업에 일임(문종철 외, 2014)

-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가시화되면,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현지에 잔류하는 다른 해외 진출기업이 현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다. U턴기업의 세제감면 실효성 부족

□ **해외 현지법인을 완전 청산한 기업에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국내 복귀 기업에게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을 사실상 강제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

-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법인·소득세 감면, 설비도입 관세 감면,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외국 인력 및 고용보조금지원, 입지 지원 등 모든 지원이 제공되며, 해외 사업장을 일부만 축소하거나, 국내의 기존 사업장과 통합하여 확장 이전한 복귀형태의 경우, 법인·소득세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거나, 지원여부가 불투명(KOTRA, 2016)

- 국내 복귀 이후 초기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보조금의 지원이 적어 자금력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애로가 많으며, 국내 복귀시 현실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등 현지 관련법령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청산이 쉽지 않아 대안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있지만, 국내 공장이 있을 경우, 공장 신·증축 등의 설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

□ **또한,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은 실제로 기업이익 발생시점 보다 국내복귀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함에 따라 기업의 정상가동에 상당기간 걸리므로 U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반감**

- U턴기업들은 해외사업장 완전 청산 후 국내로 돌아온 시점부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국내사업장 없이 해외 사업장을 부분 청산해 들어올 경우 3년 100%, 추후 2년 50%) 감면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국내 복귀 후 바로 이익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은 국내 복귀시점부터 기산하는데, U턴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는 복귀 5년 이후 정도이나 막상 이익이 나면 세금감면기간은 종료되어 U턴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는 상황에 법인세 감면혜택기간이 만료되어 사문화된 지원정책으로 평가

▣ 특히, 국내 U턴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 감면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U턴 수요와 입지지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U턴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

- 종전에는 시장여건과 업체 사정상 수도권으로 복귀하려는 U턴기업들은 신규고용 1인당 72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제외한 공장 토지매입 비용, 임대료, 설비투자액, 법인·소득세와 관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이 없었음

* U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에 의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 다만, 2016년 12월 20, 수도권지역(과밀억제 제외)으로 U턴 시 2018년말까지 조세감면을 지원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나, 비수도권의 지자체 및 국회의원이 반발

-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공장 산·증설을 제한하여 U턴기업의 지역선택을 제약하고 있음

라. 앵커기업의 U턴 인센티브 미흡

▣ 현행 U턴기업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어 U턴효과가 큰 앵커기업의 유치가 곤란

- U턴기업 지원 근거규정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이며, 구체적 지원은 시행령에 의해 결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이 제한되어 투자유치효과가 큰 앵커기업의 U턴기업 유치의 제약요인(문종철 외, 2014)

- 현행의 국내복귀기업 인센티브와 규제체계 하에서 해외 생산기지의 신설 혹은 증설계획을 변경하여 국내 생산시설에 신규로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확대할 앵커기업이 있는지 의문

마. 자금조달 애로

▣ 현행 고용보조금 1년, 설비투자 한도액 60억 원으로는 초기의 시설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국내 영업실적이 없는 U턴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도 없음

- 국내에서 사업개시후 U턴기업이 정상화가 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나(직원의 직무교육 및 적정한 생산성 확보 시일, 개도국의 가격경쟁력 극복에 따른 시간 등),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국내복귀 초기에는 설비투자, 운영자금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최소한 총 투자금액의 50%가 있어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 영업실적이 없는 U턴기업은 금융권의 여신/신용 등을 평가할 근거가 없고, 개인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시중 금융권에서 각종 대출을 규제하여 사업관련 대출의 실행이 곤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제도상 지원책이 있으나, 보증서 등 신용보강을 요구하며, 이 경우 보증서 발행기관의 발행조건이 더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 특히, 국내로 U턴한 기업들의 경우, 해외 현지투자자에 비해 고용보조금이 미흡

* K전사 사례 : 116억 원의 투자금 중 정부지원금은 25억 원 가량이며, 나머지 91억 원은 30억 원의 자기자금과 60억 원의 금융자금으로 U턴을 추진 중이나, 실제 해외에 재투자를 할 경우 30~40억 원이면 동일한 규모 이상의 공장 투자를 할 수 있어 투자비 대비 효율에서 불리하고, 금융조달 자금 60억 원도 각 부서별 지원정책기준이 달라 조달방안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됨

바.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반기업 정서 등 열악한 기업환경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가장 큰 진입장벽은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와 인력수급 곤란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국내 기업환경에서 비롯

- 국내로 U턴 희망 기업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고임금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로서 이러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고임금의 장벽을 타파할 강도 높은 해결책과 국내 생산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급선무

- 실례로 중국에 음향기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의 U턴을 시도했으나, 200여명의 국내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⁶⁾

▣ 특히,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U턴 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한 반면, 한국은 경제민주화, 대기업 차별규제 양산, 반기업 정서 등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일로

-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가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의 인하, 노동시장 규제 개선으로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는 추세

6) 황용식(2016,10,13), [브릿지 칼럼] U턴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표 10〉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유치 전략

미 국	독 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하 추진 (35%→28%, 제조업 25%) • 설비투자 세제혜택 연장 (1년→2년) • U턴기업에 최대 20% 이전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조세부담 완화 (38.7%→29.8%) • 노동시장 연장 (주 48시간) • 해고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단계적 인하 추진 (40.7%→38.0%→35.6%→23.9%→23.4%→23.2%) • 입지제한 규제 완화 • 노동 유연성 확보 (파견기간 1년→3년)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를 일부 보완

사. 경직적인 제도 및 법 운영, 체계적인 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미흡

□ 동일업종 영위규제 : U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계속 받고 지원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나(U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사양업종의 경우,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어려움

- U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항 :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야 한다.

□ 최초 국내복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 시, 국내외 시장변화, 개별기업의 사정, 관련법규의 변동과 관계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불이행을 점검하여 기존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일괄 회수하는 방식은 불합리

- 예시) 사업계획서 내용 : 토지계약 후 일정 기간 내 투자, 투자금액의 하한, 투자 이후 일정기간 내 직원고용, 고용직원의 유지, 투자 및 고용의 계속 등

- 신규 산업단지에 공장 증축 이후 신규채용인원 고용의무기간 2년은 너무 짧음 : 출퇴근 교통편, 주변 인프라 미흡 등 국내시장의 현재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 이전의 사업계약대로 이행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U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최대한 기업편의에 맞추어 서류작성 간소화 등의 One-Stop서비스가 필요하나, U턴기업이 시 또는 관할관청을 방문해 A부터 Z까지 진행해야 함

- U턴기업이 선정되기까지, 시청,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공단, 고용노동부, KOTRA,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찾아 협의해야할 기관이 많고, U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금조달을 위해 수많은 금융기관 및 정책기관을 찾아 가야 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기관별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각각 개별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사업일정으로 전체 사업계획에 차질 초래

-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U턴지원 관련 별도규정 없이 일반기업으로 분류 지원하여 심사. 이 경우 해외 이전기업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없어 자금 조달에 차질 초래

- U턴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사업팀이 관련행정부서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사업의 중도 포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 밖에 전체 사업 투자비의 30~40% 이상이 공장 용지 구입비용인데 기존 해외투자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공장용지 비용은 시설·설비 투자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또한, 중소기업 U턴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중국보다 비싼 인건비 문제인데 고용 중심의 인원점수제와 투자 대비 많은 인원 확보로 점차 자동화라인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감축을 고려해야하나 인원 확보 의무화로 자동화 설비라인 구축에 애로가 된다는 의견

IV. 미국, 일본 U턴기업 지원정책의 성과 및 시사점

1. 미국

가. U턴기업 지원정책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획, 마케팅, 디자인을 제외한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강구 시작

-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의 심각한 경기불황에 따른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00년 1,964.4만 명에서 2010년 1,408.1만 명으로 연평균 3.3% 감소⁷⁾하고, 2010년 미국의 실업률이 9.6%⁸⁾까지 상승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

- 이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을 다시 진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오프쇼어링(Off-shoring) 효과 감소,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제조비용 감소를 계기로 오바마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부터 ‘미국 제조업 부흥(renaissance of the U.S. manufacture)’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조업 강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 추진

-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재선 후 첫 연두교서에서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다.”라고 언급. 특히, 해외이전기업을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리쇼어링을 강조⁹⁾

- 2010년대 초반의 경기회복 추세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5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바마 정부는 첨단 제조업 기술자 양성, 해외 이주 공장에 대한 세금보조 철폐, U턴기업 지원,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구상¹⁰⁾

나. U턴기업 지원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재진작을 위해 해외진출 미국 제조업체를 본국으로 유치해 국내 생산능력 강화와 첨단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추격을 막으며, 더 나아가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임민경·이지나, 2013)

- 2011년 6월에 발표된 “첨단제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에 관한 보고서¹¹⁾”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며, ‘첨단 제조업’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고 지적. U턴정책의 근간인 세계 인센티브, R&D 강화, 인력 육성 등이 언급됨

- 7) “Table 111. Employment by Industry(ISIC)”(2016,10),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8)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2017,02), Bureau of Labor Statistics
- 9) “President Obama Launches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2011,06),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 10)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2016,10), The White House, National Economic Council
- 11)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2011, 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2012년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와 공동 작성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세제혜택 확대계획을 발표¹²⁾

- 이 법안은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인하하고, 국내 제조활동공제법안(Domestic Production Deduction)을 통해 미국 자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적용하여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25%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설비투자비용의 조세감면(국내 이전후 이전비용의 20% 범위내에서 5년간 법인세 감면액 선지급), 설비투자 세제혜택 연장(1년 → 2년). 반면, 해외 아웃소싱 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부과(기존 해외유보금 14%, 향후 기업해외이익에 최대 19% 과세) 등
- 내·외국기업의 차별없이 동일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대·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사업별로 유연한 현금지원 및 조세감면 인센티브 제공(허서지, 2015)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법인세 감면(35%→15%, 최저한세 폐지),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미국 역수출에 35% 관세 부과 등을 공언

다. U턴기업 지원정책의 경제적 성과

□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FDI 포함)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2000~2003년 연평균에 비해 2015년 제조업

일자리가 약 400 % 이상 늘어난 반면, 오프쇼어링은 75% 감소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의 조사결과¹³⁾에 따르면, 2000~2003년 연평균 오프쇼어링으로 24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고,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는 1만 2천개에 불과해 약 22만개 일자리가 감소
- 2015년에는 오프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 7천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7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증
- 오바마 정부의 미국내 제조공장에 대한 지원정책 등으로 애플, GE, NCR, Ford, SIEMENS 등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여 지난 5년간(2011~2015) 리쇼어링 추진으로 미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1,408.1만 명에서 2015년 1,533.7만 명 연평균 2.2% 증가, 실업률은 2010년 9.6%에서 5.3%(2015년)로 4.3%p 감소

* 미국의 경영 전략 컨설팅사 A.T. Kearney는 2010년부터 6년간 미국으로 기업 및 공장을 이전한 사례를 약 646건으로 추정(A.T. Kearney U.S. Reshoring Database, 2016)

12)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2012.02.12),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13) Reshoring Initiative, "2015 Reshoring Initiative Data Report, 2016

〈표 11〉 Manufacturing Jobs/Year 2015: The Bleeding Has Stopped)

	2000-2003 Annual average	2015	% Change
New Offshoring	~240,000*	60,000*	-75%
New Reshoring & FDI	12,000*	67,000**	+400%
Net Jobs Gained	-220,000	~ +0	N/A

*Estimated **Calculated-Reshoring Library through Dec 31, 2015

자료: Reshoring Initiative(2016)

2. 일본

가. U턴기업 지원정책 추진배경

□ 2000년대 초반의 고이즈미 내각은 '잃어버린 10년'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차원, 아베 내각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엔고로 위축된 제조업 활성화 차원에서 U턴지원정책 추진

- 고이즈미 내각 :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해 1990년대말부터 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정책 추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국리스크에 따른 경영전략적인 선택 등이 일본기업들이 국내 회귀(U턴)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 아베 내각 : 2010년 이후 엔고 및 공급망 분산 등의 요인으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급증¹⁴⁾하여 산업 공동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지속된 경기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기업투자 촉진, 제조업 활성화 등 '2013년 신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차원에서 U턴기업 지원정책을 추진

나. U턴기업 지원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일본은 중앙정부가 U턴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정책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U턴기업의 국내 유치정책을 시행

- 공장 신·증설 U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U턴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기업입지촉진법 등을 통한 규제개혁, 세율인하, 경제특구제도 등으로 U턴기업에 대한 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의 성격이며,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차별없이 적극적인 세제지원(허서지, 2015)

□ 고이즈미 내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특구제도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아베내각은 법인세율 인하, '부흥특구' '전략특구'를 지정하여 기업U턴 촉진시책 추진

-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집권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투자를 제한했던 각종 규제를 철폐(수도권규제인 「기성시가지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하고, 2007년 6월에는 「기업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
-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에 부합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기업유치 전담부서 설치, 공장부지, 설비, 인력 고용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본정부의 U턴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임민경·이지나, 2013)
- 아베내각은 2011년, 3.11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일본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하고, 입주 U턴기업에 특혜를 주겠다고 발표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34%에서 20% 선까지 인하¹⁵⁾하며, 도쿄, 오사가 등 국가전략특구에 규제특례조치와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투자지원 등을 통해 일본내 활발한 기업활동 지원

14) 일본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 추이(일본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 15.6%(2012) → 16.7%(2005) → 19.1%(2007) → 18.1%(2010)→20.3%(2012)

15) 일본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3.9%(2015) → 23.4%(2016.4.1.~2018.3.31) → 23.2%(2018.3.31.이후)로 인하

〈표 12〉 해외 일본 현지법인의 지역별 철수 현황(기업수)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세계	470	449	472	659	608	572	510	554	628
북미	127	94	81	140	113	110	63	73	70
아시아	아시아	57	85	57	371	339	317	314	406
	중국	231	235	303	200	181	166	188	205
	ASEAN4	123	82	151	90	68	65	54	68
	NIEs3	52	69	75	68	74	71	60	80
유럽	45	77	65	90	106	103	95	76	101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제45회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개요(2014년 실적, 2015.7.1. 조사)

다. U턴기업 지원정책의 경제적 성과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U턴촉진정책에 힘입어 2009년에 해외 현지법인이 2009년에 659개사가 국내로 철수하여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628개사로 증가세로 전환

- 중국의 고임금과 납기 지연 등으로 2009년 이후 중국 생산시설의 일부를 일본의 국내 공장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2014년 중국에서 274개 기업이 철수(전체의 44.3%)

- 이에 혼다(자동차), 파나소닉(가전제품), 샤프(가전제품),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일본내로 이전하거나 일본 국내에 설비를 증설 및 확충하는 사례 발생

-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제조업체 조사결과, 2014년 실적과 2015년 계획을 대상으로 해외생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U턴에 대한 응답률이 7%에 달함(이장균, 2016)

* 2016년 회계연도에 17조 5128억 엔이 국내 설비투자에 투입되어 2015년 보다 10.9% 증가(일본정책투자은행)

3. 미국·일본 U턴기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 한국, 미국, 일본 3국 모두 자국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증가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와 국내

경기불황에 대응하여 국내투자 촉진, 제조업 육성을 위한 U턴기업 지원정책은 공통

- 다만, 한국은 U턴기업지원법을 제정(2013년)하여 시행 중이나, 미국, 일본은 U턴기업 지원정책이 전반적인 제조업 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 별도의 단일 근거법령은 없음

□ 미국, 일본은 기업규모,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투자 성격과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U턴기업을 지원하나, 한국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만 해당되고, 수도권은 U턴지원을 제한

- 특히, 미국, 일본은 기업환경 개선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나, 한국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검토 등 차별규제가 많고, U턴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범위가 제한

□ 이에 따라, 미국, 일본은 앵커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U턴) 사례가 많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가시화 되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 U턴은 1건도 없고, 효과도 극히 미미

- 최근 5년간 미국은 약 630건, 일본은 2,872건이나, 한국은 2013년 이후 21건

V. 한국기업의 U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주요 기업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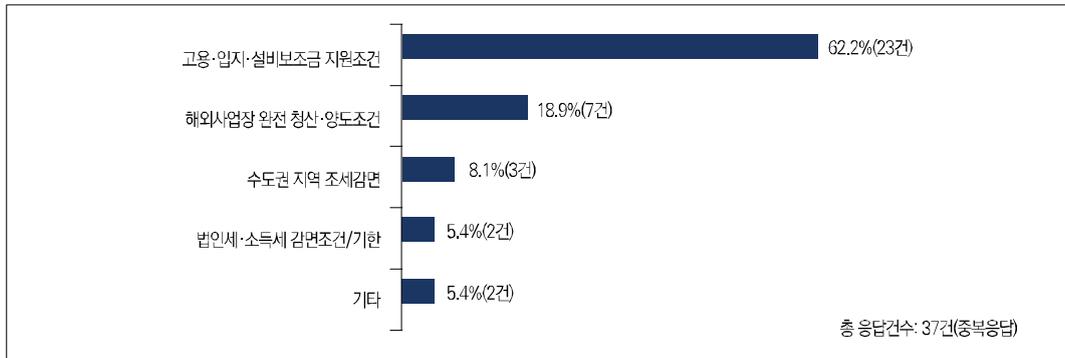
□ **현행 U턴지원촉진법 상 개선사항으로 U턴기업들은 '고용·입지·설비보조금 지원조건' (62.2%)을 가장 많이 요구하며, '해외사업장 완전 청산·양도조건 완화'(18.9%)가 뒤를 이음**

- 그 밖에 '수도권 지역 조세감면'(8.1%), '법인세·소득세 감면조건/기한 완화'(5.4%), '기타 인력수급상 규제 개선 등'(5.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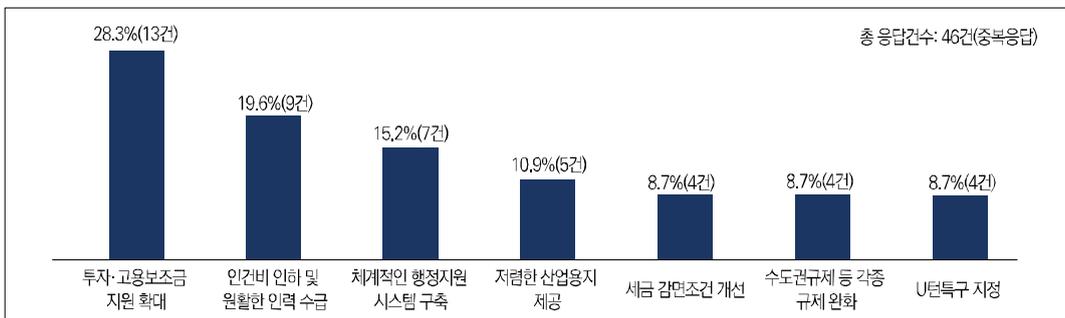
□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가 활성화 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투자·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28.3%)가 가장 많았고, '인건비 인하 및 인력수급 원활화'(19.6%) 순**

- 그 밖에 '체계적인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15.2%), 저렴한 산업용지 제공(10.9%), '세금 감면조건 개선', '수도권규제 등 규제 완화', 'U턴특구 지정'이 각각 4%로 나타남

〈그림 10〉 U턴 촉진 위한 U턴기업촉진법상 개선과제



〈그림 11〉 U턴 촉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2. 한국기업의 U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가격경쟁력 제고, 시장확보 등 기업생존을 위해 최적 생산지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나, 아울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창출기회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특히,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모 및 지역차별없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자국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U턴) 촉진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나,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규제로 당초 기대와 달리 국내기업의 U턴실적이 미미한 실정

□이에 U턴효과가 큰 앵커기업과 수도권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 한국은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신흥국가 인건비 상승,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제조업의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U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근본적인 해법

- 신규 고용 창출의 기여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업종의 U턴 촉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임금 해소, 경직된 노동시장 관련규제를 개선, 법인세 인상 철회, 기업국적별/규모별 차별규제 철폐 등 기업투자 촉진제도 개선 필요

- 특히, 'Made in Korea' 브랜드 활용 목적으로 중국 등으로부터의 U턴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U턴 기업(30社)의 36.7%(11社)에 해당하는 등 인건비 활용 등의 중심에서 탈피

□또한, 기업U턴 촉진을 저해하는 현행 U턴기업지원 법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 세제 감면혜택 및 자금조달의 실효성 제고, 앵커대 기업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신속적인 U턴기업 지원제도 운영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스마트팩토리 지원 등 제조업 U턴 촉진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

가. 세금 감면 및 자금지원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해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정부관련기관 등의 확인서만으로 청산에 같음하도록 허용하여 U턴기업들이 법인세 감면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아울러 법인세의 감면 외에도 투자금의 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처리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기업U턴이 어려워므로 국내 정부기관의 확인서로 대손처리 허용을 검토(법인세법 개정)

□고용 확대를 위해 U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입지비용의 지원을 확대

- 법인·소득세의 감면혜택 산정시점 개선 : 국내복귀 시점 → 기업이의 발생시점

- 고용보조금 지원기한 연장(1년→3년) 및 지원한도 확대(1,080만 원/년→2,000만 원/년)

- 입지 및 설비지원금 한도 확대 : (입지) 5억 원 → 10억 원, (설비) 60억 원 → 100억 원

-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많아 실제로 현지 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분복귀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유턴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외사업장을 부분축소(생산량 감축)하는 U턴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소득세 감면대상 및 설비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국내외 시장변화 또는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당초 국내 복귀신청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 이미 지급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일괄 회수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므로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유예하거나, 감면, 분할하는 방식의 법적기준 마련

□ **국내 실적이 없는 복귀기업들의 시중 금융권에서 사업 관련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 이전에 업체 평가 시 기업평가를 확고히 하거나, 보증서 이외에 국가 또는 지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제도 개선**

- 아울러, U턴기업으로 선정되면 토지매입시점에서 1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토지매입 후 착공신고 후 2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금지원을 개선하고, U턴기업 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대(담보설정/CB와 같은 지분 확보)를 통해서라도 실질 지원금 확대

나. 앵커 대기업, 수도권 지역 U턴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의 U턴 보다 고용·생산효과 등 한국경제 발전에 되는 고부가치업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앵커대기업 및 U턴 수요가 큰 수도권지역 U턴 시에도 인센티브 부여**

- 앵커기업 상당수가 대기업이므로 이들 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분명하거나, 협력업체와 동반으로 U턴하는 기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가시화 된 이후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선택하는 등 많은 협력업체의 U턴을 유도할 수 있는 앵커기업의 유치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문종철 외 2014)

- 이에 산업고도화,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U턴기업의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

- 또한, 수도권 지역은 국내 전체 등록공장수의 절반 가량(2016년 말 기준 48.1%, 팩토리온)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비율로 수도권 지역에 대해 U턴기업 입지총량제를 도입하여 입지선택의 제한을 일부 완화

- 수도권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방법보다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다. 신속적인 U턴지원제도 운영, 체계적인 U턴 지원시스템 구축

□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영위 업종이 사양업종인 경우, 유사한 업종 또는 새로운 업종의 경우에도 U턴기업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도록 동일업종 영위규제 완화**

□ **U턴지원 관련업무가 One-Stop 처리되도록 범정부적 총괄기구 구축**

- 최대한 U턴을 원하는 기업들의 편의에 맞추도록 U턴업무 컨설팅, 서류작성 간소화, 인허가 지원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One-Stop 행정지원기구 및 시스템 구축

- U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게 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에서 U턴기업 지원 신청 및 심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 재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처리

-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 청산에 관한 지원과 함께 이들 기업 및 현지에 잔류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이 현지에서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시설의 국내복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문종철 외, 2014)

[참고문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김동열·조호정(2012),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문병기·김건우(2016),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문종철·조현승·고대영(2014), 산업별 해외투자의 현황분석과 진출기업의 U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2016), U턴기업 현황, 내부자료

이장균(201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행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15-28호

임민경·여지나(201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U턴 유형화 및 U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희정(2015),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15-08호

일본정책투자은행(2016), 전국설비투자계획조사(대기업)

일본 경제산업성(2016),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일본제조업의 해외생산비중 추이

조혜영·박종배·강혜정·공보경(2013), 제조업의 해외투자 특성변화와 국내 투자환경 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전인우(2009), 해외로부터의 국내 U턴기업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방향(지식경제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https://www.femis.go.kr>), 통계정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www.ecos.bok.or.kr>), 국민계정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keri.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회계연도 경영실적 분석」, 2016

허서지(2015), 해외 제조업 르네상스 사례와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Issue Paper 제233호

황용식(2016.10.13), [브릿지 칼럼] U턴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KOTRA(2016), 국내복귀 기업지원 가이드

KOTRA(201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http://www.ois.go.kr>)

A.T. Kearney(2016), U.S. Reshoring Database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7),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7.0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2011. 6)

Reshoring Initiative Data Report: Reshoring and FDI Boost US Manufacturing in 2014 (www.reshorenw.com)

Reshoring Initiative Data Report: Reshoring and FDI continued to Boost U.S. Manufacturing in 2015 (www.reshorenw.com)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2011), "President Obama Launches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11.06)

The White House,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2016.10)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2),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2.02.12)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6), "Table 111. Employment by Industry(ISIC)" (2016.10)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